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I. 서론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고 판결된 이후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중단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비판과 찬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의 합의하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성안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입지까지 결정된 상태였다. 입지결정 이후에도 해당 주민들의 반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과 추진과정 등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당초에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 된 것이라고 환영하겠지만, 신행정 수도 건설을 적극 찬성했던 분들이나 적어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도를 옮기는 자체가 워낙 대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 수도이전에 대한 검토를 10년 이상씩 하고 있는 이유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골육지책으로 제안되었다.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성장 억제를 통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유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오히려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져 왔다. 우리나라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성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수도권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기업 도시가 되고, 세계화하려면 지금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곧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이전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이를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병행 추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win-win)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적인 효과는 오히려 다른 대안들보다 오히려 적을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본 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자 한다.

II.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장 일변도의 발전모델에서 탈피하여 성장과 균형을 병행하는 분권과 분산의 발전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명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성장을 위해 형평성을 간과하여왔다. 그 결과 무역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역간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인 인구집중도는 1960년 20.8%에서 2002년 말 현재 47.2%를 기록하였다. 특히, 수도권 중 주요 중심 기능이 밀집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전 국민의 39.1%가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기업 수 기준)는 2002년 말 현재 56.4%이다. 공기업의 본사는 83.2%,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총량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1.6%에 이르렀고, 2000년에는 52.6%로 더 증가하였다(국토연구원, 2002).

수도권 과밀의 폐해로 언급되는 것이 수도권인 택지 부족과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증대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이다.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으로 100%를 넘어섰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기준으로 각각 82.4%와 91.6%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택지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혼잡은 2001년 기준으로 10.5조 원에 달하여 환경오염의 정도는 수도권인 비수도권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어 계획대로 약 50만명의 도시가 생성되고 수도권에서 약 35만명이 이주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빠져나간 인구를 대신하여 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더 많은 인구가 몰려올 수도 있다. 수도권에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경제적 손실보다 크기 때

문에 인구의 집중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신행정수도 건설 효과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주로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집중의 억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이후 수도권은 강한 규제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의 입지가 제한되어 왔다.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가 유지되고 있어 기업들의 신규 또는 증설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에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수립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금융, 배후도시개발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강력한 수도권 입지 규제로 인해 충청권의 일부지역은 공장이 늘어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표 1> 역대정부의 주요 시책 및 평가

| | 주요시책 내용 | 평가 |
|---------------------|---|--|
| '62~'79 (3·4공화국) |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64) · 그린벨트 지정 |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 |
| '80~'87 (5공화국) |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 | · 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 '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 |
| '88~'92 (6공화국) | · 지역균형개발 기획단 설치('89) ·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 ·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 |
| '93~'97 (문민정부) | ·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 개발촉진지구 도입('94) · 준농림지 개발 허용 | ·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초래 · 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내 공장·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
| '98~'02 (국민의 정부) |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규제 완화 | ·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 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

출처: 신행정건설추진지원단(2003),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을 보면 기업도시의 건설, 역세권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도시, 교육도시 건설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계획

들이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신행정수도와 같은 메가톤 급의 계획은 아니다. 기업의 투자유치와 지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도시 건설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는 토지수용과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하여 반대의 의견도 많다. 혁신도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이지 인위적으로 건설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도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 명문 대학을 옮겨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도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의 입지를 강요할 수는 없다. 어렵기는 신행정수도나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될 때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한편,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대전의 제2정부청사의 건설 경험은 있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했다. 수도권에 기업이 입지하기 원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이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시장이 커서 생산된 제품을 팔기에도 수도권이 유리하다.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에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지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면 기업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지방에 입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영시대”에 기업은 본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서울도 아닌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영국의 런던 등에 본사를 두어야 경쟁력이 더 생길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공공기관이 특히, 중앙부처가 서울을 벗어나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970년 대 말의 백지계획과 비교하면 그 당시는 국가안보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에 비해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균형을 이루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III.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빅딜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이 언급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국가의 경제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오히려 국가의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폐

지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최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 동의하고 있는 대명제에서 부터 출발을 하자.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동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분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과 선진국의 약진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장기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눈부신 성장 속에 세계의 자본을 모두 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너트 클랙커 (nut cracker)의 운명에 빠질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언제까지 우리의 수출대상국 1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상품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중국을 옆두에 두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여론 분열과 혼란은 결코 나라 장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데 반대의 의견은 없을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실행(action)을 해야 한다. 이미 국민 소득 1만불이 넘은 지 10년이 지났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춰도 된다면 아무런 계획도 정책도 필요 없다. 굳이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 소득 2만불, 3만불의 국가로 성장해야 하지 않는가. 지역간, 계층간에 분배도 우선 살아남고 난 후의 일이다. 성장이 되어야 나눌 파이도 늘어난다. 분배를 우선시 하는 것도 성장이 잘 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업은 떠나고, 투자를 하지 않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눌 것인가.

이제 적어도 목표에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위기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열강들의 각축 속에 또한 주변국가들과의 경쟁속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생각해보자. 첫째는 다른 계획과 결부되지 않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곳은 그나마 수도권이다.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 등으로 인해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지 못하다. 국가적인 결단으로 몇몇 투자유치가 성공된 사례는 있지만 웬만한 끈기를 가지지 못하면 수도권에 투자를 결심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다. 법률만 검토해보면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 수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은 첨단산업일 경우 수도권 성장 관리권역 내에 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첨단산업의 정의가 경직되어 있어 신산업의 창출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해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놓치고 있다.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에 비해 적게는 1.3배에서 2배로 크다. 똑같은 자원을 수도권에 투입했을 때 국가의 경제성장은 배가된다. 수도권의 혼잡비용이 높아 수도권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수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유입되고, 기업이 투자를 원하는 곳이라면 아직까지 집적 이익이 손실보다는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기업의 투자와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실행가능한가. 수도권 규제를 풀자고 하면 비수도권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40년간 지속되어 온 수도권 억제 정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규제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폐지는 경제적으로는 최상의 대안이지만 정책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대안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수도권 규제 폐지하는 안을 생각해보자.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과 같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방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력과 재원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중앙정부의 기능이 최소화되는 것이 낫다. 현재의 권력과 기능을 그대로 가진 채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또 다른 수도권이 탄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들은 다시 새로운 수도권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교통거리도 늘어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지방분권을 먼저 시행하면 사실상 작은 정부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별 관계가 없다. 통일을 고려한다면 평양과 서울 사이의 어딘가로 통일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여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정책 추진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산업진흥정책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여왔다. 이들 정책들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충청권에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중앙부처가 충청권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입지 결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전 계획이 백지에서 다시 검토된다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클러스터정책은 산업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지방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기업도시는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업을 환영해도 투자를 할까 말까인데 이래서야 어느 기업이 기업도시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실행 가능한 대안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최선이다. 모든 지방분산화 정책들이 신행정수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기업도시 건설 등은 동일한 수준에서의 대안들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도시건설 대안도 국립대인 서울대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이름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고, 명문사립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해당 교수들이나 동문, 학생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 막대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럴 바에야 정부가 가는 것이 더 낫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여 지방거점을 육성하면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폐지에 대한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

<표 2> 신행정수도 건설의 비용편익 구조

| | 편 익 | 비 용 |
|------|--|--|
| 국가공동 | ① 분권국가·분산사회 가속화 ②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통합 ③ 도시분포왜곡 완화의 단기 소득효과 ④ 국토공간구조 개선의 장기 소득효과 ⑤ 신 행정수도건설을 통한 경기활성화 | ① 직접 건설비용 ② 건설을 둘러싼 국론갈등 비용 |
| 수도권 | ① 민간부문의 편익 - 교통혼잡비용 감소 - 환경파괴의 억제 - 외국인투자 유치여건 개선 - 부동산 투기위험의 감소 ② 도시공공서비스 공급비용 감소 - 추가적 신도시 개발비용의 절감 - 도시재개발비용의 절감 - 교통시설 건설비와 관리비 절감 | ① 수도권 공동화 ② 신행정수도로의 접근비용 - 출장 교통비용 - 동반 이전업체의 이전비용 - 이전대상기관 임직원의 직장과 가정의 분리로 인한 교통비용 |
| 비수도권 | ① 신행정수도 지역경제 활성화 ② 산업입지 개선의 증기 소득효과 | ①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

주: 편익비용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

출처: 강동희(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과 건설사업의 적정시기”

두 대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대안은 아무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소위 Do-nothing 으로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첫 번째 대안인 수도권 규제 폐지안은 경제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대안인 Do-nothing

은 무책임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뒤쳐져 만년 소득 1만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First-best를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Second-Best 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다.

IV. 향후 추진 방향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우선, 충분한 여론 수렴기간을 갖도록 하자.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을 들어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어떠한 대안이 가장 좋은지 토론을 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이 아니라,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토론을 하자. 우리의 토론문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토론회가 있어도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끊임없이 펴는 것으로 끝난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서로 양보와 설득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토론회를 보면 이러한 목표 의식을 잊은 채 마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토론회의 모습만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쟁점이 될 때마다 TV, 신문지상 등을 통해 얼마나 토론이 이루어졌는가. 동일한 쟁점에 똑같은 사람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의견들만을 개진하여왔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은 테니까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정부의 정책을 믿고 타지에 농지를 구입한 분들이 있다. 곧 금융비용 때문에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의 금융비용 등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희(2003), 신행정수도건설의 경제적 타당성과 건설사업의 적정시기
국토연구원(200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김성배(2003), 신행정수도의 기능적 특성과 입지선정기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쟁점과 과제